

성인경

라브리선교회 총무, 한동대학교 강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위원

## 문화대통령을 기다린다

문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문화논리’라는 것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무엘 헌팅턴의 리포트,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은 21세기가 이념이나 정치, 경제논리보다는 문화논리, 즉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며, 세계적인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문명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980년대말 공산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다. 바로 문화이다. 세계 정치도 문화와 문명의 패션을 따라 재편되고 있다.”<sup>1)</sup>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세기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막연한 “장미빛”<sup>2)</sup>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은 듯이 보인다. 우리 나라 문화예술

---

1) 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김영사), pp.20-21

2) 이어령, “2천년을 여는 대합창을 위한 빅이벤트의 준비를...” 문화예술 7월호, p.26

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송태호 문체부 장관은 “문화의 세기라 예견되는 2000년대에 대비하여 문화한국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의 ‘문화비전 2000’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sup>1)</sup>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책기조는 문화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송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정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진정한 국민복지의 실현은 먹고 사는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달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화를 단순한 교양수준이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병리 해결을 도모하는 생산적, 예방적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임을 의미한다”<sup>2)</sup>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 인식뿐만 아니라 준비상황도 미비하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현실과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문화가 다음 세기에는 문화민족의 제2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1)우리 나라 문화정책을 검토하고 2)그 후에 차기 대통령후보들의 문화적 인식도를 간단히 점검해 본 후에, 3)이를 기초로 개인적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쓰여진 것이다.

## 1. 문화정책의 혼선이 민족문화를 망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전개된 우리 나라 문화예술정책이 얼마나 민족문화에 악영향을 미쳤는가, 그 역사를 더듬어보면 문화정책의 문제와 그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대사를 살았던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좌절은 그 주무부처의 정책혼선과 그 맥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송태호, “문화현실과 문화정책” 문화예술, 1997년 7월호, pp.12,13

2) 송태호, 앞의 글, p.12

해방 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주무부처와 그 이름이 수차례 바뀌어 왔다. 해방 후 미군정시대의 '학무국'에서 출발하여 이승만 정권 시대의 '문교부'와 '공보처'를 거쳐 군사정부 시대인 3-6공화국의 '문화공보부', 6공화국의 '문화부'에 이어서, 현 문민정부 시대에는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로 바뀌어 왔다. 그에 따라 문화정책이 오락가락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sup>1)</sup> 편의상 시대별로 문화정책의 흐름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1940-50년대

이 시기는 정부수립 후에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피폐, 사회적인 불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시기로서, 문화정책에 투입할 자원은 고사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문화정책이란 것이 보존과 규제가 전부였으며 기껏해야 문화재를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민족문화가 파괴, 단절되고 국민들은 가치관적 혼돈에 빠져버렸다. 그 와중에 많은 지식인들이 서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최봉영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분단과 625전쟁을 체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의 비극이 전통문화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통문화 자체가 한국인을 비극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전통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와 단절이 자행될 수 있었다. 지식인들이 그것을 앞장섰다."

2)

1) 오양열은 우리 나라 문화정책이 혼돈의 역사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변천역사를 로스토우(W.Rostow)의 발전단계론을 따라 비교 연구했다. 그는 다섯 단계로 우리 나라 문화정책 발전사를 나누었는데, 1)1948-60:문화정책 생성기, 2)1961-72(73):개발기, 3)1973(74)-80:기반조성기, 4)1981(80)-89:도약기, 5)1990-현재:성숙기로 분석했다.(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문화정책논총 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P.33-67)

2)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사계절), pp.239-240

## 2) 1960-70년대

이들때면 이 시기는 박정희 시대로서 문화행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체계를 확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을 장려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으로 규제 내지 통제하는데 치중했으며, 1966년에 설립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연극, 영화, 무대예술, 문학, 음반, 음악, 미술 등 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비정치적 주제만을 가지고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했다.

더욱이 유신독재시대에는 명목상으로는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문예진흥계획' (1973)이란 것이 추진되었고 정부의 지원체계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살아 보세"라는 경제논리하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과 전통문화의 계발을 빌미로 민주화의 욕구를 무마하기도 했다.

그 시대를 풍미하던 경제와 안보논리 때문에 민족문화 창달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 전반에는 서민들의 상부상조문화대신에 개인주의 문화가, 명예와 윤리, 도덕보다는 "돈이 최고다"는 물질주의 문화와, 개성과 자유보다는 경직된 군사문화가 번창하게 되었고, 충효사상이 정치적으로 왜곡, 변질되기도 하고, 전통 가옥의 멋들이 해체되어 버리기도 했다.

## 3) 1980년대

이른바 이 시기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대였는데, 정치적 후진성과는 달리, 문화의 법적 지위 향상과 문화적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생활문화와 통일문화를 지원하고, 대규모 문화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독립기념관, 국립국악원 등의 건립이 그것인데, 문화의 인프라(Infrastructure)가 보강된 것이다. 6공화국의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내세운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이라는 정책모토와 새로운 문화전략인 '문화주의', 즉 문화로 사람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 때 문화부가 추진한 전문예술가 양성을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창작공간의 확충, '예술의 해' 제정 등에서, 문화창조력 신장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을 택한 것 등은 지금까지의 직접적인 지원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오양열은 이것을 두고 "문화정책이 문화공급에 대한 수요기반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력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되었다."1)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늘 그렇듯이, 이들 군사정부는 민족문화의 중흥보다는 서구식 대중문화와 저급한 소비 지향적인 향락 문화에 빠지는 것을 방관 내지 조작하였고, 그리고 문화시설들은 단기간에 실적 위주로 건립된 것이었기 때문에 비가 새는 등 부실 공사로 끝나고 말았다.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5공화국의 정통성 결여는 민중문화운동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것은 6공화국과 문민정부에 이르러 새로운 형태의 전통문화계승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4) 1990년대

1993년에 발표한 '문화창달 5개년 계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에 걸맞은 문화체육의 창달을 신경계 건설과 함께 '국가발전의 두 수레바퀴 중의 하나'로 보고, 문화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자율로', 즉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팔목할 만큼 문화 이벤트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란 취지 때문에 이미 독립되었던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축소 조정한 것은 국민의 주머니는 생각하면서도 다음 세기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민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다. 그러나 문체부 예산을 1%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민족문화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다가올 21세기의 '문화의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1) 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문화정책논총 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62

일말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문화정책의 난맥상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것을 꽃피우기보다는 규제, 단절, 변질, 정체를 낳았다. 최근에 송태호 장관은 지난날의 문화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듯이, 우리의 문화 현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고백한 바가 있다. “문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고 하여 그 문화수준까지 자동적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문체부 산하 연구기관인 문화정책개발원에서 1996년도 조사한 ‘국민문화복지 수요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 정도가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영화, 음악회, 전시회 같은 가족 동반의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족들로 자리를 가득 메우는 귀국 독주회의 양산과 같이 단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화인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지식인은 양산되지만 진정한 교양인은 많은가, 또 문맹률은 낮지만 과연 독서를 즐기는 국민이라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sup>1)</sup>

또한 문화정책의 혼선 그 뒤에는 나라를 맡았던 대통령들의 정통성과 문화정책이 있었고,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민족문화가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건축문화와 가치관문화 같은 경우는 아예 고유문화의 독특성과 다양성이 크게 파괴되기도 했다. 그나마 남모르게 한국문화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분들이 곳곳에 있었기에 이 정도의 보존과 전진을 이룩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면 문화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차기 대통령은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있을까? 후보들의 문화의식을 점검해 보자.

---

1) 같은 책, p.11

## 2. 대통령후보들의 문화의식 점검

짧은 지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의식을 정확하게 점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후보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문화정책의 단초를 읽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이 논문을 위해 대통령 후보를 낸 4개 정당의 홍보실이나 비서실에 질의서를 보내어 그 대답을 듣기도 했지만, 대답이 없는 일부 후보는 언론 인터뷰나 그 밖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 1)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의 세기'를 보는 입장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의 시대를 보는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 입장은 비슷하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문화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화를 잉여가치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요체로 보아야 한다." "21세기는 경제와 더불어 문화의 세기이다. 이제 문화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21세기는 고부가 산업으로 경쟁할 것이며 그 근본은 문화와 예술의 발달에서 비롯될 것이다."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문화시대가 오고 있다는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분히 경제논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는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 문화민족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다시 국민들은 그 지긋지긋한 정치적인 '쇼 비지니스

(show-business)'<sup>1)</sup>에 초대되어 있고, 국가예산의 1%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재정으로 "문화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오늘도 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문화논리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책의 구체성이 화려한 후보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있는 등, 후보마다 입장일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문화를 상품화하는 정책에 웬 관심이 그렇게 크지 모르겠다. 이른바 후보들마다 '문화상품'이니, '문화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를 문화로 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경제성이 없는 문화라도 문화는 문화이다. 모든 좋은 문화는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철학과 가치가 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인 서울대 김문환 교수도 후보들의 경제논리에 대해 우려하기를, "문화가 뜻하는 인간적인 가치지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에 주목한다면 또 무슨 비문화적 사태가 정책의 이름으로 전개될지 사뭇 불안해진다."<sup>2)</sup>고 했다. 이제 문화시대에 걸맞게 정치나 경제 논리가 아닌 문화논리를 가지고, 문화를 문화답게 보는 새로운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 최근의 만화, 영화, 소설 등의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선을 위해 자율권을 유보해야 한다는 견해와

---

1) '정치란 바로 쇼비즈니스와 같은 것이다.'고 처음 말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다. 우리 나라에도 시작된 텔레비전 유세와 광고는 영상 매체의 속성상 자칫 국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 있는데, 매체전문가인 Neil Postman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모든 정치적 문제가 단순한 방법을 통한 빠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둘째, 복잡한 언어는 믿을게 못되며 모든 문제가 연극적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난다. 셋째, 논쟁은 좋은 것이 못되며 참을 수 없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이다. 닐 포스트만, 죽도복 즐기기(도서출판 선한이웃), p.179

2) 김문환, 신동아 1997년 7월호, p.234



민간자율심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최종판단은 소비자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 등 분분하다. 대안도 후보에 따라 완전등급제 실시, 전용관 설치, 철저한 유통관리 실시 등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현세의 '원국의 신화'에 대해서도 그것을 검찰이 문제 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문제는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하여 저질 음란 폭력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영화사전심의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sup>1)</sup> 이후로는 마치 표현의 자유와 한계가 없어진 것처럼, 청소년 유해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세태를 타고 스포츠신문의 음란성이 더욱 심해졌고, 지난 8월 1일 스포츠3사의 편집국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이제 법정시비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스포츠신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권장회 총무의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sup>2)</sup>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의식하여 모호하고 단기적인 견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좀 더 분명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음란, 폭력에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견해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1) 우리 나라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열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의 한계를 정해두었다. 지난 해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문화예술계가 '강제적인 검열제도'로 상상력과 창작활동이 제한 받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권장회 총무가 분석한 문제점들은 이런 것들이다. 첫째, 소위 '소프트코어 포노그래피(softcore pornography)'의 전형, 즉 여성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기 보다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을 '재미'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한다. 둘째, 사적인 영역의 상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어 수치심과 경외심을 통한 질제와 존중보다는 충동에 따라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으로 만든다. 셋째, 스포츠지의 음란 폭력성이 다른 대중문화를 그 방향으로 선도하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저질 섹스상품의 광고 정보지이다. (권장회, '스포츠지는 대중문화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 스포츠신문 바로잡기 시민운동백서, 기윤실, 1997)

### 3) 다음 세기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조에 대한 견해

대체로 후보들의 정책방향과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민정부와 세계적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이런 것들이다. "우선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문화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고 신명나는 환경 속에서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을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그 독창성과 전문성을 살려나가겠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전담부처의 독립을 도모하겠다."

모두 정책은 화려하다. '문화정보 서비스', '민족문화 창조', '전담부처 독립' 등 거창한 정책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원론에 머물러 있고 구체성도 없고 그 추진 방향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다. 한 예로, 모두 '문화를 꽃 피우겠다'고 하는데, 젊은층이나 일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패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이 그것이 가능할지 의심이 든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한국 전통문화는 자기의 관심이나 종교나 생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분간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들간의 혹은 정당간의 '문화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하겠다. 그 역작용으로 문화개혁이나 문화창조보다는 오히려 반문화적인 발상들이 대두될 가능성도 많다. 이미 일부 계층에서는 개혁보다는 고립을 자초하거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차기 대통령은 문화논리를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에 종속된 것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 예술적 의욕을 크게 감소시켰던 지난날의 정책적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 3.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일종의 지적 모험이다. 더구나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나에게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고 가지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sup>1)</sup> 우리가 사는 시대를 관찰하면 다음 시대를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에 용기를 내어 우리나라의 문화정책과 그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문화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 나라 문화예술계는 지원도 별로 없이 끊임없이 간섭을 받아왔다. 그러기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기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에 눌려있던 문화예술계를 위해서는 자유의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 나라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화정책의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원만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챙기지 않는 정책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다소 그 기조를 수정해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행사에 특정 종교적이고 무속적인 굿판을 허용하는 것 등은 무책임이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치러진 ‘아시안 게임’에서 동래지방의 굿거리 장단과 춤을,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치 그것이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비록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행사에 기대를 건 사람이라면, 아마 굿거리 문화의 전통성에는 놀랐겠지만 그 문화적 보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거액을 들여 5년간의 대역사 끝에 복원된 익산 미륵사지 동탑은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있다. 유홍준 교수에 의하면 복원된 탑은 “박제된 시체”<sup>2)</sup> 같다고 했다. 비록 미륵사지탑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과 힘

1) 참고, 마태복음 24:32

2)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3권, 창작과비평사, pp.221-222

이 드는 문화재 복원은 필요성, 기술성, 예술성뿐만 아니라 그 복원의 의미성, 즉 “오늘의 삶에서 전통의 의의를 발견하고 삶 속에 녹아들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도록 하는 것”<sup>1)</sup>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면 왜 정책의 보편성과 의미성에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창조적인 문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여 때문이다. 국제적인 행사에 선을 보이는 문화는 우리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정책결정에 체육계와 예술계와 더불어 종교계 인사들의 견해를 다양하게 수렴하고 잘 챙겼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간섭을 안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문화시대의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은 기조로 바뀌는 것이 좋겠다.

첫째, “지원하면서 책임을 묻는다.”, 혹은 “지원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지원만 하고 책임을 묻지 않거나 대안이 없다면 정부의 감독, 선도하는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둘째, 창조적인 문화 모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한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징물들(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등)을 선정해 주었던 것처럼 건전한 문화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를 들어 헐어버린 구 총독부 자리에 단순한 경복궁 복원 사업보다는 민족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독립공원이나 임시정부기념관 등을 세운다던가<sup>2)</sup>, 우리 나라 정신문화의 5대 취약점(지역감정, 남녀차별, 성윤리 부패, 종교갈등, 부정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정갑영, 『21세기를 향한 우리 나라 전통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113

2))이 의견은 본래 이만열 교수님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 분은 식민잔재와 피해의식을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구총독부 자리에 독립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임시정부기념관을 함께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복음과상황 1997년 8월호, pp.26-30

## 2)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보편문화를 만들자

가까운 일본에는 '일본문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문명' 혹은 '황하문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한국문명'이라는 말도 없다. 최근에 '문명의 충돌'을 쓴 사무엘 헌팅턴은 중국문명과 일본문명을 언급하면서도 하필 한국문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왜 한국에는 '한국문명'이라는 것이 없을까?

나는 그 이유가 전통문화 계승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과 중국은 자기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며 외국문화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리며 현대문화를 만들었다.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올 여름과 같이 찜통더위 속에서 웬 검정 옷이 길거리를 매우는지, 우리가 과연 백의민족인지 흑의민족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민족색의 단절은 고사하고 기후에도 맞지 않는 옷맵시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 어느 지방을 가나 건물과 주택이 '그게 그것'이고 아무런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이다. 아름다운 제주도에는 돌담집은 간데없고 벽돌집들이 웬 말이며, 천년 고도 경주에는 고층 아파트가 웬 말인가? 문화 관광객들이 꿈이나 유럽으로 빠져 나가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문명의 단절과 보편문화의 부재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문화의 특징을 "질박함, 따뜻함, 구수함, 다정함, 단아함, 공동체적 정서를 담은 친근함, 신명남"이라고 말한다.<sup>1)</sup> 그렇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한국문명의 개성이고 진수이다. 나는 우리 문화가 동양 종교의 범신론적 정체성의 허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편문화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문화예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문명은 크게 네 가지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무속문화 혹은 무당문화의 '음악과 춤'은 그 기복성에도 불구하고 노

1) 박은경, 복음과상황 1997년 8월호, p.126

래와 가무를 사랑하는 민족정서가 잘 나타나 있다. (2)불교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승려문화의 절정은 건축이다. 전국의 빼어난 절경 속에 세워진 사찰들과 석굴암 등은 그 염세주의에도 불구하고 건축문화의 걸작이다. (3) 유교문화 혹은 선비문화는 그 윤리적 명예와 형식에도 불구하고 교육열과 예의범절 등 배울 것이 많다. (4)비종교문화 혹은 서민문화라 할 수 있는 놀이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그네뛰기', '제기차기' 등은 그 해학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등 놀이철학이 있다.

그러면 이런 한국문화를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로 창조해 갈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는) 청년문화로서 대중문화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있어 청바지와 더불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록음악이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보편문화는 비교적 종교적 색깔이 약하면서도,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탁월한 문화부터 세계화를 시작해야 한다. 제일 먼저 음악, 음식, 의복, 언어, 주택 등을 들고 싶다. 아마 그 중에 독특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한복과 김치 등이 아닌가 한다.

둘째, 건전한 외국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미 '수세식 화장실'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외국문화를 수용하여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마당에, 민족주의적인 폐쇄주의때문에 좋은 외국문화에 무조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모든 좋은 문화는 인류가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문화의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우리 나라 대중문화계가 그대로 흉내내지 않도록 선도해야 한다.<sup>2)</sup>

셋째, 성경적 원리에서 직접 도출된 문화들은 한국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1) 이주현, '대중스타 탄생 또 하나의 혁명' 한겨레 1997년 8월 29일, p.12

2) 이주현, '대중스타 탄생 또 하나의 혁명' 한겨레 1997년 8월 29일, p.12 이주현은 최근에 대중문화와 욕망의 관계를 잘 분석한 바가 있다. 개인의 욕망을 질대시하고 청년의 꿈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대중문화가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는 없다. 위대한 대중문화의 전원지인 미국도 개인의 욕망이 확대될수록 더 큰 사회의 파편화로 고통받고 있다."

그 뿌리를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만인평등'과 '남녀동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직업소명'과 '구제와 분배'와 같은 찬란한 인류문화들은 본래 기독교 정신에서 잉태된 것들이다. 서양 근대과학도 기독교의 합리적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 중에는 오늘날의 이런 고급문화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줄로 알고 파괴와 해체만을 일삼는 대중문화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문화의 계승과 문명 만들기를 통해, 민족문화 창달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문화발전에도 공헌을 할 때가 되었다. 예수께서 팔레스틴 지방의 토속적인 '밭짓는 문화'를 온 세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섬김의 문화'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sup>1)</sup> 음악성, 건축미, 교육열, 효성 등은 세계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한국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도록 노력하자.

### 3) 문화개혁을 멈추지 말자

인류가 이룩한 20세기말의 현대문화는 화려하다. 곳곳에 최첨단의 과학, 정보, 영상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토플러가 지적하는 '쓰고 버리는 소비지향적인 문화', 후쿠야마가 지적하는 '신뢰가 없는 문화', 앙드레 말로가 지적하는 '신비주의적인 문화' 등 어두운 면도 없지 않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잘못된 철학이 있다.

특히 상대주의적인 포스트모던 세계관이 그런데, 그 세계관을 이용하는 사악한 영적 세력들도 있다. 만약 이 점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문화시대는 단지 꿈에 지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대문화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꾸준히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첫째,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자유로 문화

---

1) 요한복음 13:4-17

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현대문화이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노래나 춤, 영화, 연극, 문학, 놀이뿐만 아니라 건전한 외래문화도 많다. 그런 것들은 국가나 교회가 일일이 통제하기보다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배우고 계승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의 정신을 따르는 것인데, “교회나 국가가 아닌 제3의 인간생활 영역, 즉 아디아포라(adiaphora)는 교황도 제왕도 관여할 바가 아닌 개인의 양심의 재판에 맡겨야 할 문제”<sup>1)</sup>라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는 그 자체로 다 악한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심의 자유가 있다. 나도 칼빈과 개혁주의 문화신학자인 반틸의 의견을 따라 “일상적인 문화는 개인의 자유의사대로 필요에 따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sup>2)</sup>고 믿는다.

둘째, 개혁은 도덕적, 문화적 기준이 분명한 주체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든, 예술계든, 종교계든 도덕적 문화적 기준이 분명한 주체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엘리엇(T. S. Eliot)의 의견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이를 복음으로 유지할 수 없다.”<sup>3)</sup>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일에 앞장서면 좋다. 만약 음란, 폭력, 이혼, 동성애 등을 지금과 같이 그냥

1) 'adiaphora'란 헬라어 'ἀδιάφορον'에서 나온 말로 추측되며, 그 의미는 '무관심사(indifferent thing)'란 말인데,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은 개인의 취미생활과 음악, 건축, 기술, 과학, 사회의 축제, 의, 식, 주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런 생활 영역들이 교회와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개인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이 '양심의 자유와 아디아포라' 정신은 칼빈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 Henry R.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p.137)

2) Henry R. Van Til, 앞의 책, p.288 반틸은 여기에 악기, 과학, 공업, 발명, 질병예방, 라디오, 텔레비전, 차 등을 포함시킨다. 나는 예수님도 당시 유대지방에 있던 결혼식과 포도주(요한복음 2:1-12), 손 씻지 않고 밥먹는 전통(마태복음 15:1-20), 세금제도(마태복음 22:15-22) 등을 허용하셨다고 본다.

3) Henry R. Van Til, 앞의 책, p.310



방치한다면, 교회도 머지 않아 같은 증독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sup>1)</sup>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문명은 그 예술적, 기술적 우수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종교적 메시지가 깊이 내포된 문화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한 민족문화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고 미신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폐기하는 편이 더 좋다.

셋째, 한국문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타락한 문화를 개혁했던 것처럼<sup>2)</sup>, 100년 전에 당쟁과 술과 가난과 남녀차별로 찌들었던 이 나라에 개혁의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sup>3)</sup>, 그리고 영국과 같은 해적민족이 문화민족으로, 정복문화가 공생문화로 바뀐 역사처럼 말이다.

생명을 불어넣는 개혁작업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문화개혁 작업을 위해 호머 바네트(Homer Barnett)가 제안한 원리를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문화개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성공할 수 있다: (1)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기존의 것에 비해 보다 나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2) 사람들의 기존 생활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될 때, (3) 일부 불만족의 기미가 사람들에게서 포착되었을 때.<sup>4)</sup>

1)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너는 이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3:1-5, 4:3-5)

2)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의 타락한 문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땅의 문화, 즉 남녀차별, 지역감정, 우상종교, 성적문제를 치유하셨다. (요한복음 4:1-42)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그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려 노력했다. (철학: 요한복음 1:1-3; 소유: 사도행전 2:45-47; 종교: 사도행전 17:23-34)

3) Harvie Conn(한국명 간하배)은 그의 청춘을 동두천 기지촌 여자들을 위해 헌신한 미국선교사인데, 100여년 전에 한국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때 한국에 변화의 여건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 사역을 손쉽게 맛볼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Harvie Conn, 같은 책, p.154)

4) Harvie M. Conn, 'Conversion and culture' Down To Earth(edited by J.Stott), p.15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개혁의 모델은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일부일처제'로 바꾸고, 여자의 '월거지약'을 '남녀평등'으로 바꾸고, '새벽제단'을 '새벽기도'로 바꾼데서 이미 실험되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나는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한다면, 그와 동일한 역사가 모든 영역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 4) 미학 혹은 세계관에 눈을 뜨자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정치사적으로나 경제사적 혹은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 즉 미학적이고 종합적인 세계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란 책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한 유홍준 교수도, 세 번째 책을 내면서 "첫 번째의 두 권에서는 사랑과 관심이 주제였다면 세 번째 책에서는 미학의 성격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미학적 관점이 없이는 문화를 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는 미학 혹은 세계관 읽기와 적용이라는 말이다. 유교수는 파노프스키가 한 말도 추천한다. "하나의 작품 속에는 인간 정신의 기록과 기쁨과 고뇌, 소망과 믿음이 서려 있는 바 미술품을 통해 인간 정신의 발달과정을 탐구하면서 더 높은 고양을 구현하는 것이 미술사의 임무이다."<sup>1)</sup> 미학적, 세계관적 관점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세계관, 즉 미학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즉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의 결과가 문화이다. 그렇게 볼 때 성수대교와 삼풍 백화점의 붕괴는 무사안일주의가 낳은 부끄러운 문화이다. 반면에 한글과 측우기 등은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민본주의 정치관의 열매이다.

서양역사를 문화적으로 분석한 프란시스 셰퍼의 전제도 같은 것이다.

1) 유홍준,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비평사, p.7 에르빈 파노프스키는 [인문학의 실현으로서 미술사]란 책을 저술한 금세기 최고의 미술사가라고 한다.

“역사와 문화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사람들의 사고에 근거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다.”<sup>1)</sup> 그러기에 모든 변화의 중심은 세계관이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큰소리치더라도 사실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계관은 문화를 잉태하는 패러다임이며, 그것에 따라 문화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다음 세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문화전쟁’, ‘문화충돌’이란 말들은 결국 미학, 혹은 세계관의 전쟁이요 충돌이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셰퍼는 로마제국을 그 예로 든다. “로마는 야만족들의 침입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었다. 로마는 충분한 내부적 초(세계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망해갔는데, 야만족들은 단지 로마의 멸망을 앞당겼을 뿐이다.”<sup>2)</sup>

셋째,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힘을 제대로 못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세계관이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힘을 못쓰는 주된 원인은 ‘마음의 허리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sup>3)</sup>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건강한 지성과 절대적 세계관을 말한다. 비록 마음도 뜨겁고, 지식도 넓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다 썩어 가는 새끼줄 같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으로는 힘을 못쓴다.

청소년들이 정신적 지주가 없는데, 어찌 이 험난한 음란과 폭력과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겠으며, 21세기에 문화 창조의 선구자들이 되겠는가? 청소년들에게 튼튼한 가죽 허리띠를 매게 하자. 즉 건강하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분명한 세계관으로 무장시키자. 나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가장 믿을만한 세계관은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유대, 기독교의 세계관이라 믿는다.

1) Francis A. Schaeffer, How should we then Live?, p.19

2) Francis A. Schaeffer, 같은 책, p.29

3) 신약성경 에베소서 6:14;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13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21세기는 밝아온다. 그리고 올해가 저물기 전에 그 시대의 처음 시작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지도자이어야 할까? 한 마디로 그는 세종대왕이나 솔로몬 임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어려운 시대를 잘 수습하고 정치, 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각각 민족문화를 꽃피운 분들이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 등을 발전시켜 한국문명의 터를 닦았고, 솔로몬은 건축, 음악을 비롯한 전 문화영역에 창조적인 유대문화를 건설했다. 우리는 그들의 시대를 일컬어 '문화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기 대통령뿐만 아니라 21세기에 한국을 책임질 모든 대통령은, 종합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문화논리와 문화정책을 가진 문화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제2의 문화의 황금기가 밝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